

민형배 “전남광주 하나의 생활·경제권 그릴 것”

대전환기획위, 시·도 업무보고...각 사업 현황 진단 주문 AI·에너지 첨단산업 육성 논의...12대 현안도 별도 보고

다음달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 기획위원회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시정·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10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 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광주·전남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산업·경제를 비롯해 복지, 행정, 건설, 문화, 환경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각 시·도별 현황과 핵심 정책, 향후 추진 전략 등을 공유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오전에는 산업·경제·농업 분야 보고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산업실과 경제창업국,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참석했으며 전남도는 전략산업국과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농수산식품국 등이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민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AI 인프라와 전남의 에너지 자원을 연계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시·도는 AI 국가데이터센터와 AI 집적단지,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벨리 조성 계획 등 미래 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지역에 구축된 AI-에너지 기반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산업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교육과 홍보, 감사,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11일에는 기획·행정 분야 보고와 함께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준비단은 현재까지의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안전, 건설, 관광, 문화, 환경, 해양 분야에 대한 보고도 차례로 진행된다.

시도는 이번 업무보고와 별도로 통합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10일 오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8개 시·도로부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첫 업무공유회를 주재했다.

별시 출범, 여수세제섬박람회, 기업 투자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시내버스노선 개편, 공공기관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 12개 핵심 현안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시도는 이들 현안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도는 각각 20명씩 모두 40명의 직원을 파견해 인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제도, 지역 간 갈등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부담 없이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통령은 이어 필립 벨기에 국왕과 첫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증진하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인명사고 막고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안전인력 411명 투입·불편신고센터 운영

전남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바가지요금·알박기 근절에 나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이용객 편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도내 53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운영 목표를 ‘인명사고 제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등 안

전시설 3400여 대를 확보했다.

또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물론 폐장 후 2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개장하지 않는 해수욕장 13곳에는 입수 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경찰과 해경, 지역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 감시를 강화한다.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과 알박기 등 부당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파라솔과 펄상 등 편의시설 사용요금을 시군 누리집과 현장에 사전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간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필요시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편신고센터를 통한 민원도 신속히



전남도에 최근 도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처리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모래사장 정비와 샤워실·화장실·오피스 처리시설 개선, 수질 조사 등 11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입해 개장 전까지 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질과 배사장 토양, 방사는 검사 결과도 공개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백태건 전남도 해양경찰청장은 “소방과 경찰,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해양치유와 해양레저스포츠, 반려동물 친화 해변 등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한 만큼 많은 관광객이 전남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벨기에와 정상회담

무역 증진·교육 협력 논의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바르트 더 베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정상과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증진하

고 중소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또 유럽 내 한국학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국 주요 교육기관의 협력과 미래세대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이대통령은 이어 필립 벨기에 국왕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반도체 ‘청사진’...‘입지’가 관건

▶1면에서 이어 따라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와 장성은 광주 생활권을 기반으로 정주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광주 도시철도 연장,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정주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기업의 경제성과 공급망 효율성이 우선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투자설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존 생산

거점 투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 호남권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첨단산업과 전남 장성을 비롯한 호부지들이 전력·유수·교통·인재·정주여건을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시대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전력과 인재, 정주환경”이라며 “호남권은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생태계와 생활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투자 유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 선출

친윤계 당권파 경남 3선 의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3선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사천)은 10일 국회에서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에겐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에서 총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어 48표를 획득



한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7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47표, 김 의원이 39표를 얻었고 3위를 기록한 성일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0표를 기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함께 경선을 치른 김, 성 의원을 향해 “이제 경선은 끝났다. 오직 국민과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서재필 생가’서 계속

제3자가 해당 지분을 낙찰받을 경우 역사 공간의 활용 방향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 사유재산 문제로 훼손되거나 활용에 제약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정섭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은 “서재필 생가는 단순한 개인 주택이 아니라 독립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며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재필기념공원이 위치한 보성군 문덕면 일대는 대원사, 백민미술관, 승주 고인돌공원 등과 연계된 역사·문화 관광 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교육·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12·3 계엄 연루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정보수집 기능은 폐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되는 동향조사·인사정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해체와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방첩사가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급 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며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